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다. A와 B는 모두 (가) 을/를 정치라고 보지만, A와 달리 B는 (나) 을/를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A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면, B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한 국가의 고유 활동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B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가)에는 ‘국무 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아파트 내 공동 사용 시설의 활용 방안을 입주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세기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쿡은 ‘국왕이라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통치라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A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그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내용까지도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B가 등장했다.

- ① A는 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이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③ B는 법률에 근거한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A와 B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C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B는 A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시된 진술들에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 C 중 B를 견제하는 수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A가 (가) 을/를 통해 B를, C가 (나) 을/를 통해 B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A는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 ② C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 ③ B는 A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 ④ (가)에는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다양한 주민 참여 방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서 의결한 조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B가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참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방법 중 하나인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가)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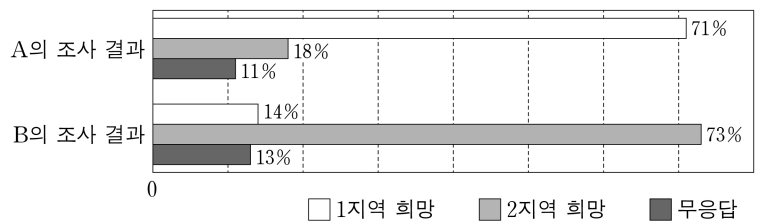
<보 기>

- ㄱ.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ㄴ. B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ㄷ.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 ㄹ. (가)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직을 그 임기 중에 주민들의 투표로 상실시키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와 B는 ○○구 관내 1, 2지역 중 어디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 각각 자신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상인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정치 참여 집단의 구성원 다수는 주요 상점이 밀집해 있는 1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다. 반면,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 참여 집단의 구성원 다수는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2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다. A와 B는 각각 자신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중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을 각 단체의 입장으로 정하였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C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① 지역 주민을 유권자로 하는 ○○구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확정하여 ② 공표하기로 하였다.

<보 기>

- ㄱ. A는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ㄴ. B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
- ㄷ. ①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ㄹ. ①과 C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은 국가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라 문화 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촉진한다. 이는 국가가 문화의 발전을 헌법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A의 실현에 기여한다. 또한 이 법은 문화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화 향유의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B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된다.

- ① A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 교육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 ②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 ③ B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④ A와 달리 B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B와 달리 A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제적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된다.

7.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복수로 취득한 자는 한쪽 면허에 따른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나머지 면허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A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이 규정이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을 단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B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A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④ B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갑과 을은 여름 방학 5주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각각 친권자와 상의한 후, 상시 근로자 10명이 고용된 ○○ 식당의 사장 병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근로 계약에 따르면 업무 내용은 매장 정리이고,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휴일: 일요일, 월요일),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휴게 시간: 14시~15시), 임금은 시간급으로 법정 최저 임금이다. 근로 기준법상 병은 을과 달리 갑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① 갑과 달리 을은 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이 15세라면, 을과 달리 갑은 근로 계약 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된다.
- ③ 갑이 병과 합의하여 기존 근로 계약 내용 중 갑의 근무일만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을이 병과 합의하여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0시까지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병이 갑, 을과 각각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했다면, 병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갑과 을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칼럼

1991년 오늘,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A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국제 연합 가입을 승인하였다. 이는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인 B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가입을 권고함에 따라 진행된 후속 절차였다. 한국은 여러 차례 가입을 시도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대국 간 세력 경쟁 속에서 B의 상임 이사국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 사회가 대화와 협력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전방위적인 수교 및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 연합 가입에 초석을 쌓았다.

<보 기>

- ㄱ. A는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 ㄴ. A의 의결은 회원국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 ㄷ. B는 10개 상임 이사국과 5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ㄹ. B와 달리 A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의 컴퓨터 매장에서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할인 판매가 진행 중이다. 을(16세)은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 가격이 300만 원이고, 매장에는 재고가 없지만 일주일 후 입고된다는 갑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을은 내일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일주일 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인도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갑이 동의하여 을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갑과 노트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은 다음 날 용돈으로 모은 100만 원을 갑에게 송금하고, 그날 저녁 을의 법정 대리인 병에게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에게 전화해 계약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후 병은 갑과 을이 약속한 잔금 지급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갑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갑에게 전화하여 송금 사실을 알렸고, 갑은 잔금이 입금되었음을 알고도 매장에 입고된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을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성능의 다른 노트북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 ① 갑은 병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부터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 을이 갑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당시 갑은 을에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을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성능의 다른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을 당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병이 갑에게 전화해 갑과 을의 계약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을 당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따라 갑과 을의 계약, 갑과 병의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병이 ○○건물에 대한 갑과 을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건물에 대해 자신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유도했다면 갑과 병의 계약은 B에 따라 무효이다.

- ① A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② A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형성한 법률관계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 ③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A에 근거한다.
- ④ B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나 다른 개인이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⑤ B에 따르면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3세)과 을(15세)은 병의 가방을 낚아채 훔쳐 달아나다 행인 정에 의하여 체포되어 사법 경찰관 무에게 인계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정이 사건 당시 갑과 을을 체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을은 무에게 적법하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무에게 폭행을 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① 갑과 을 모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을과 달리 갑은 병의 가방을 절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정의 체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무를 폭행한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병이 당시 현장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갑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병의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기차역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 체포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갑의 스마트폰도 압수되었다. 이후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체포 당일 촬영한 동영상이 갑의 스마트폰에 대한 적법한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 영장 발부가 이루어져 집행되었다. 검사의 기소로 갑은 ㉢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법원은 ○○법에 따라 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보 기>

- ㄱ. 갑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았다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갑에게 별도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될 필요가 없다.
- ㄴ. 갑은 ㉠에 대하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을 위해서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의 단계에서 보석을 통하여 석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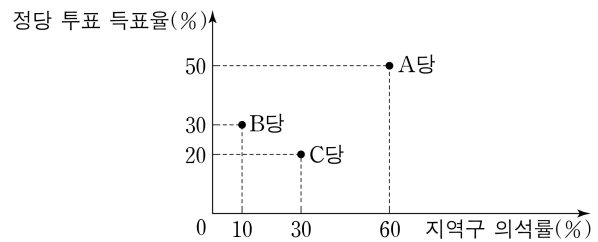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갑국의 t~t+2 시기 의회 전체 의석수는 500석으로 동일하고 의회 전체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t+1 시기 의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비례 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이다.
- t+1 시기 지역구 의석수는 t 시기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이고, t+2 시기 비례 대표 의석수는 t 시기 비례 대표 의석수의 2배이다.
- t~t+2 시기 중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으며,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 t+1 시기에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t+2 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동일인이 아니다.
- t 시기, t+1 시기 정당별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 대표 의석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A당	B당	C당
t 시기	지역구 의석률	10	40	50
	비례 대표 의석률	10	30	60
t+1 시기	지역구 의석률	30	20	50
	비례 대표 의석률	20	50	30

t+2 시기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인이 선출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정한 후,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다음은 갑국의 t+2 시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 *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에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 갑국에는 A~C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t 시기에 C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 ㄴ. t+1 시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 ㄷ. t 시기와 달리 t+2 시기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위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t+1 시기가 t 시기의 2배이다.
- ②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t 시기와 t+2 시기가 동일하다.
- ③ t+2 시기에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 ④ t+2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 ⑤ t+2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수가 t 시기의 1.5배라면, t 시기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갑의 자녀 A(13세)가 을의 집 앞에서 축구를 하다 A가 찬 공이 을의 집 대문을 파손시켰다. 그 소리를 듣고 을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데리고 나왔고, 반려견이 택배 기사 B를 갑자기 물었다. 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B는 그 기간에 택배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을은 A,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송에서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점과 갑이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한편 을은 자신의 집 대문 수리를 병에게 맡겼으나, 병의 직원 정은 과실로 대문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을은 자신의 집을 무에게 임대하였고, 무가 대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중 설치·보존상 하자로 대문이 떨어져 C를 다치게 하였다. 을은 이 사고로 대문 수리비와 설치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① 을은 B가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임금 손실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갑은 을에 대하여 A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정은 을, 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④ 무는 C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을에 대하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은 사용자로서 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면제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혼 관계의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출생하였다. 1년 후 을은 갑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그때부터 을은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홀로 A를 양육하였다. 갑은 을과 이혼하기 일주일 전 유언 없이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다. A가 4세 되던 해 을은 병과 법률혼을 한 후 B를 임신하였다. 이후 을과 정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병이 이혼을 요구하여 을과 병은 이혼의 협의를 하고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B 출생 다음 날 을과의 이혼을 신고 하러 가던 병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해 정은 을과 법률혼을 하였고, 3년 후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한 달 후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

- ① ○○건물은 갑과 을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② 갑과 을이 이혼 신고를 한 때부터 갑의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③ 병의 사망 당시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 ④ 정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때부터 을과 정은 A, B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 ⑤ C의 출생 당시 C는 A, B와 친족이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흐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국내 문제 불간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학설은 반복적인 관행과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A에 해당하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에 영향을 미쳤다. 이 원칙은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동의하여 체결된 B를 통해 국제 사회에 선언되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다수의 ① 재판에서 개별 국가가 타 국가에 강제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것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 기>

- ㄱ. A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ㄴ. 국가와 국제기구 모두 B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ㄷ. A와 달리 B는 성문화되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ㄹ. ①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 당사국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법을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 갑국 형법
- 제□□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조(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 제○○조(무면허 운전죄)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생 1: 절도죄의 법정형은 강도죄의 법정형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A에 위배됩니다.
- 학생 2: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B에 위배됩니다.
- 학생 3: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면허 운전죄를 적용하는 것은 C에 위배됩니다.
- 교사: 모두 옳게 대답하였네요.

- ① A는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B는 관습법을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③ C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④ A와 달리 B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이다.
- ⑤ B와 달리 C는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법원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재판소에 (가) 을/를 제청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을은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한 방송에서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인적 사항 등을 노출한 사실로 고발되었다. 검사는 을의 행위에 대해 ○○법 조항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소에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보 기>

- ㄱ.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사자의 (가)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에 (가)를 제청할 수 있다.
- ㄴ.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기관에 의해 직무상 권한을 침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이 갑과 달리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